

자치도 출범 직후 후속작업 '속도'

전북도, 실행준비단 구성 5대 분야 75개 사업 방향 설정·계획 수립

특별자치도 비전 다질 2단계 특례 발굴·도지사 권역별 도민보고회도

전북도는 오는 18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곧바로 각종 특례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333개 특례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특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북도는 오는 12월 27일부터 특례들의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 생명산업분야 17개 사업을 비롯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분야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분야 16개, 차기권분야 15개 사업 등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 계획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모두 75개에 대한 기본구상을 짜고 있다.

도는 이들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

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구역, 실시계획구역 등으로 분류하고 자체용역은 물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특례별 생생 준비단(TF) 중심의 자체 방향설정과 매월 2회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주요 특례와 여러 부처에 걸친 특례, 쟁점사항이 존재하는 특례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과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여 등 심층적인 논의를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법과 관련된 자치법규 입안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도

민들에게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도민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전주와 김제, 30일 익산과 군산 등 7개 권역에서 특별자치도 주요 내용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특례를 활용한 각 시·군별 발전전략 등을 설명하면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기로 했다.

시군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은 연중 실시하고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특별자치도의 생명경제 미래 가치를 찾기 위한 글로벌 생명 국제포럼(가칭)도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전라분야의 생태계 분석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정책 등을 특례로 도출시키기 위해 현

재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특례들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2단계 특례 발굴을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별법 2차개정에 맞춰 입법과제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특례들의 실행력을 높이면서 그동안에는 국도기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이제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이고 최상위 법적계획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들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례들이 전북자치도의 비상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올해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지원·생활 안정 돕는다

전북도, 생활보조비·명예수당 월 10만원 등 지급 11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전북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1월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지급 대상자는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 또는 유족이며, 단 생활보조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결정된 사람을 말하며, 신청·접수 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에 관련자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생활지원금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로 나뉘며,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이하를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되고 제비는 공헌자 사망 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1

회 100만원이 지원된다. 명예수당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은 불가하다.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은 올해 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3년 전라북도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49명(생활보조비 6명, 명예수당 43명)이 지원받았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위원회 운영, 민주화운동 기록물 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연구용역, 민족민주열사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자격요건이 되는 공헌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당, 이재명 사당화됐다"... 전직 의원들 탈당 대열에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이낙연 신당 합류 선언
최성·장덕천·이근규 등
전직 지자체장들도 합류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탈당 및 새로운미래 참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덕천 전 부천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신 전 의원, 최운열 전 의원, 이근규 전 제천시장.)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전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합류를 공식화했다. 신 의원은 "양당 과정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종언을 고사하고 있지만, 현실 정치가 이를 버려주고 있다"며 "선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양당 과정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타락이고 배신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는 오랫동안 한쪽에서는 괴이한 침묵이 지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이한 소란이 떠돈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았다면 미래의 희망이자 버팀목이 됐을 것이고 총선은 이미 압승으로 접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 결정이 개인적으로 합류지만 바른 일이 되길 바란다. 후배들과 자녀들이 그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왔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오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한계 탈당을 선언한 한 최 전 의원은 "진보라고 위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떠나 합리적 진보세력으로서 개혁적 보수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해법을 찾고자 그동안 사당

하고 몸 담았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국민은 갈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성 전 고양시장과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도 참석해 '새로운미래' 합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친박계 인사로 최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시스템 공천'을 외쳤지, 실제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사당화'의 길을 걸었다"며 "이 과정에서 세 차례나 불공정한 공천확살을 경험했고, 그 방식은 대단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의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북한의 수령 체계에서나 있을 법한 정략적인 공천 확살"이라며 "더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당에서 국민적 심판을 직접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덕천 전 부천시장은 "지금과 같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시 이긴다고 해도 달라질 수 없다"며 "소위 '개별'이라고 불리는 극단적 지지자와 편향적 유투버들이 당의 흐름을 좌우하면서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들에 무릎 꿇고 같이 극대화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지자만을 위한, 개발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드러 원하는 당을 선

택할 기회를 높이고 그를 통해 정치를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진명의 뜻을 입으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도 무조건 적격, 강력한 후보여도 비명이면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이 황당할 일들이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냐"며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이 전 시장은 "민주주의 보루인 민주당에서 이렇게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형태를 일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구하겠다"며 "반칙과 특권에 눈을 가린 패거리 정치가 아닌 오직 국민만을 섬기는 정치, 민생을 우선하고 통합과 혁신을 추구해 가는 올바른 정치 문화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4일 개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19건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24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1회 임시회를 오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 자율방범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 등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민 의원), △군산시 장애인미술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이다.

또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물론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고자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제261회 임시회는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첫 회의"라며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시민이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원외모임 '민주주의실천행동' 일부 인사들, 민주당 탈당 선언

비밀계 원외모임인 '민주주의실천행동' 일부 인사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주의실천행동의 김성훈·박병석·윤갑희 소통책임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역사 곳곳에 남아있는 저희의 흔적들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길로 떠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동하는 양심과 사람 사는 세상을 가르쳐주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가슴에 담고 지난 몇 년간 겪은 사당화, 팬덤정치, 방탄정치 등의 악습 역시 반면교사의 가르침으로 기억에 새겨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는 재료로 쓰겠다"고 했다. 또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독점적 정치 무능과 퇴행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치의 퇴출,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대 양당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 시민의 목소리와 실시간으로 호흡하는 바르고 유능한 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4월 국회의원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말로 튀지 않고 발로 뛰겠다"

민주 신영대 의원, 군산 지역구 재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번 더, 군산을 더 크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신영대 의원은 1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선에 출마한다"며, "60년 평생 군산사람 신영대가 군산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책임자"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신 의원은 "지난 4년 헛발질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의정활동을 해왔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기간 쌓아온 모든 역량을 군산과 민주당을 위해 바치기로 정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대 총선 출마 당시 군산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난 4년 가까이 없는 등대처럼 군산을 밝히려 애 쓴 결과 꺼져가던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렸고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했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기동,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확정 등의 성과를 내세웠다.

1호 공약으로는 새만금통합시 설립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군산, 부안, 김제의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군산은 산업, 김제는 행정, 부안은 농생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통합을 약속했다."

이어 △전국체전 유치 △금강호·은파호수공원 정원과 △지역업체 대졸 특례보증 확대 △국제교육특구 지정 △군산 터미널 현대화 △조부도 순



주 돌봄수당 신설 △공공형 실버타운 조성 △재생에너지 수익 교육·복지 투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신 의원은 "선거 때만 잠깐 찾아와 기웃거리는 외지인은 군산의 나침반을 제대로 보지못해 배를 잘못된 방향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군산 대도와의 항해를 신영대가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말로 튀는 정치가 아닌 발로 뛰는 정치로 군산을 더 크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24일까지

주요업무 계획 청취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15일 제 25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12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이중선 의원), △익산시 마약류 및 유희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송영자 의원), △익산시 장애인 전문보장구 보령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신용 의원),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 의원)이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재현 의원은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정영미 의원은 익산시의 청년정책 조직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고, 이중선 의원은 관내 소

상공인들의 절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오민선 의원은 출생을 감소로 인해 운영난을 겪는 익산시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종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들이 단단하고 튼튼하게 잘 설계되었는지 살피고,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올해 사자성어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의 '유수동행(携手同行)'을 선정했다. 익산시의회 스물다섯 명의 의원들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편에서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